# 개관 및 종합평가

## 종합평가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시장 변동성은 확대

| | |
|---|---|
| 대내외 여건 | (대외) 중동상황 관련 영향 지속,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상존<br>(대내) 국내 실물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대외충격의 인플레이션 전이 우려 |
| 금융 불안지수 (FSI) | (변동) 상승 후 하락<br>(수준) 주의단계 |
| 금융 취약성지수 (FVI) | (변동) 상승 지속<br>(수준) 장기평균 소폭 상회 |

### 금융안정 상황

| | | |
|---|---|---|
| 가계 · 기업 신용 | 명목GDP 대비 비율 하락 | 연체율 상승 및 대출 증가세 확대 |
| 금융 · 자산 시장 | 기업실적 개선 주가 반영 | 자산가격 상승 누적 |
| 금융기관 | 복원력 양호 | 비은행 중심 상호거래 큰 폭 증가 |
| 대외부문 | 대외지급능력 양호 | 환율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 지속 |

### 리스크 요인

| | |
|---|---|
| 가계 · 기업 신용 | 가계 취약차주 비중 상승, 기업 재무건전성 업종별 차별화 |
| 금융 · 자산 시장 | 장기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 재확산 |
| 금융기관 |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관리 부담 증대, 부실 충격 전이 가능성 |
| 대외부문 | 대외여건 불확실성 상존,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순유출 지속 |

### 정책 대응

| | |
|---|---|
| 시장안정 노력 지속 | • 레버리지 투자, 환율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br>• 시장불안 요인 발생 시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
| 정책 공조 강화 | • 물가, 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br>• 금융불균형 누증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공조 강화 |
|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 •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br>• 금융시장 자금흐름 및 업권간 리스크 전이 관련 연계성 점검 |
| 취약부문 구조 개선 | •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병행<br>• 자영업 단계별 금융·산업·고용·복지 정책 연계를 통한 구조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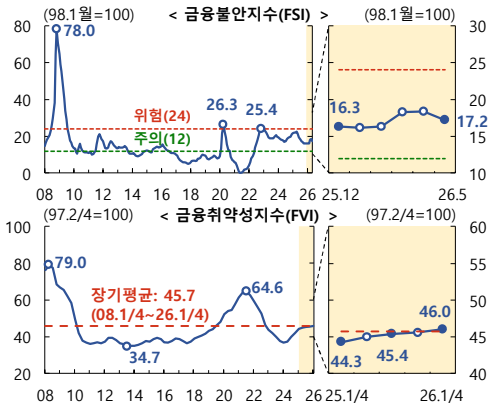
# 금융안정 상황 평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에 더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세 재확대 및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가계 및 기업 신용은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연체율은 상승하고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또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본 및 유동성 비율 등 복원력과 대외부문의 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1]는 2026년 5월중 17.2(주의단계)로, 3~4월중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025년 12월(16.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2]는 2026년 1/4분기 46.0으로 점차 상승하여 장기평균(08년 이후 45.7)을 소폭 상회하였다.

**금융불안지수(FSI)[1)3)] 및 금융취약성지수(FVI)[2)3)]**




주: 1)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 관련 금융시장, 실물, 대외, 은행, 비은행 부문의 20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와 24로 설정
2)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신용,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
3) 기초지표 추가 입수에 따른 모형 재추정 과정에서 지표 간 관계가 재평가되어 향후 지수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계 및 기업 신용**과 관련하여, 가계대출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매매 및 주식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소득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의 채무부담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상환능력[3]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은 상승하였다. 한편 기업대출은 은행 및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연체율은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여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다. 기업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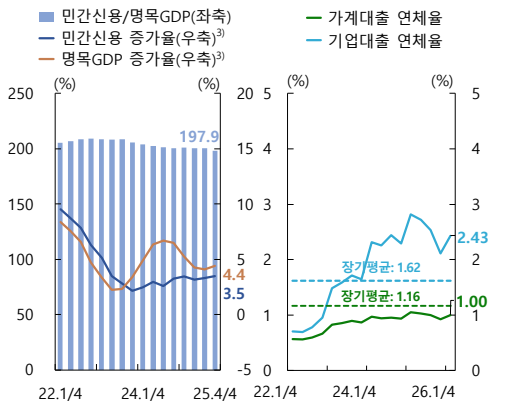
[1]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금융불안 관련 금융시장, 실물, 대외, 은행, 비은행 부문의 20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로,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12와 24로 설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2]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3개 평가요소(신용, 자산가격 및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1> 「금융취약성지수(FVI) 개편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주택소유 유형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무건전성은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업종별로 차별화[4]되었다. 2025년말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는 197.9%로, 가계(88.2%)와 기업(109.8%) 부문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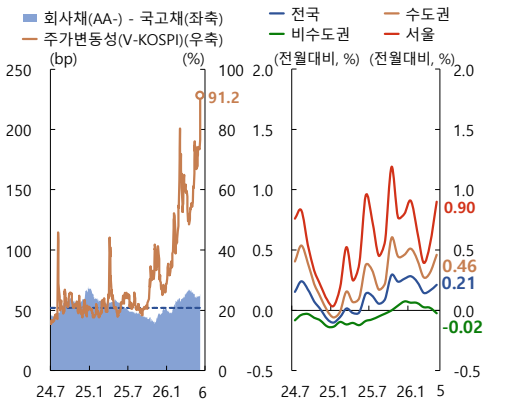
**민간신용[1] 레버리지[2]**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4]**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명목GDP(20년 기준)는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합산
3) 전년동기대비
4)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2026년 1/4분기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시장의 장기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소폭 확대되어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조정받기도 하였으나 반도체 업황 호조,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높아진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으며, 전월세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상업용부동산[5]의 경우 상가는 부진하고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상반된 흐름을 지속하였다. 한편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연초 높았던 가격 변동성이 소폭 축소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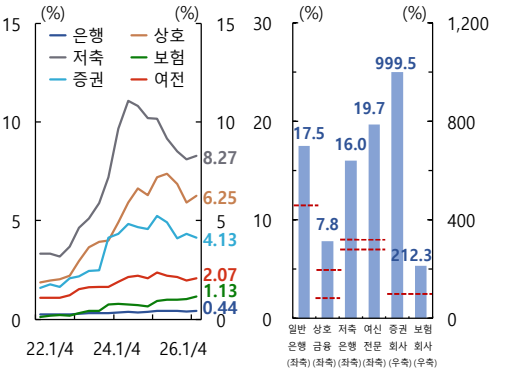
**주가 변동성 · 신용스프레드[1]**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주: 1) 점선은 2013년 이후 장기평균을 의미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은행[7], 보험 및 증권 회사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인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유동성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본적정성 비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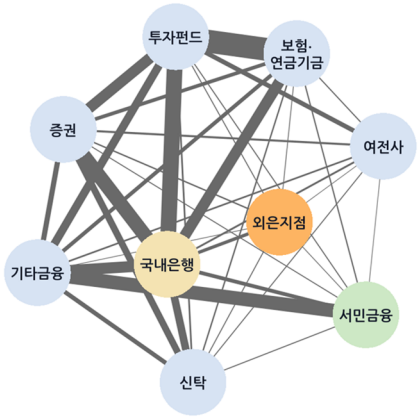

주: 1) 붉은색 점선은 각 업권별 규제기준을 의미
2) 2026년 1/4분기말 기준(보험은 2025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4] 자세한 내용은 <참고 2>「기업부문 리스크의 업종별 차별화 현황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3>「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과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자세한 내용은 <참고 4>「최근 가상자산시장 가격 변동의 특징」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자세한 내용은 <참고 5>「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 및 정리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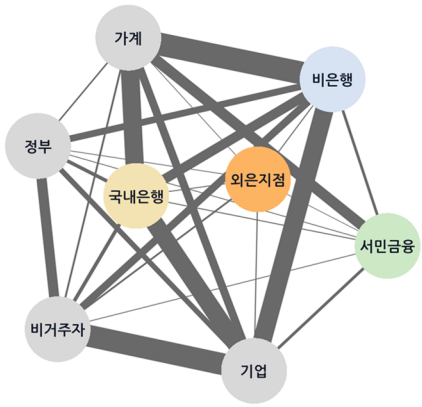
**상호연계성**의 경우 금융시스템 내에서는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권 간 연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가운데, 금융·실물 연계에서는 국내외 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비은행이 가계 부문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및 비거주자(국외) 부문으로 운용하는 중개구조가 심화되었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구조[1)2)3)]**

**( 금융업권 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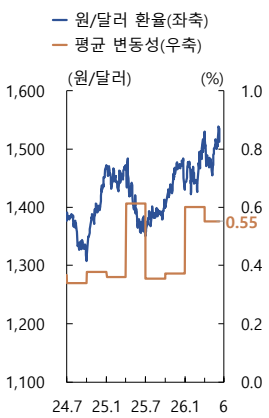

**( 실물부문과 금융시스템 간[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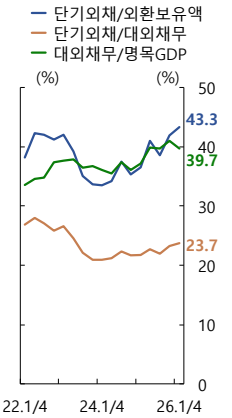

주: 1) 2025년 4/4분기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선이 굵게 나타남
3) 서민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기타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서민금융보조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체 등, 연금기금은 퇴직연금 등(국민연금 제외),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포함
4) 비은행은 외은지점 및 서민금융을 제외한 비은행부문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대외부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중동상황 전개 양상 및 내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하였으나,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되는 등 외화조달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금년중 외국인 국내증권투자[8]는 주식을 중심으로 순유출을 보인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가 둔화되었다.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소폭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강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1)]**




**대외건전성 지표**




주: 1) 일별 변동성(전일대비 변동률의 절댓값)의 분기중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및 정책**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과 금융부문 간 연계성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비율 목표(80%) 설정,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4월 1일)하였다.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환건전성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25년 12월 19일 발표)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외화 유입 촉진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금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6>「최근 외국인 국내 증권자금 흐름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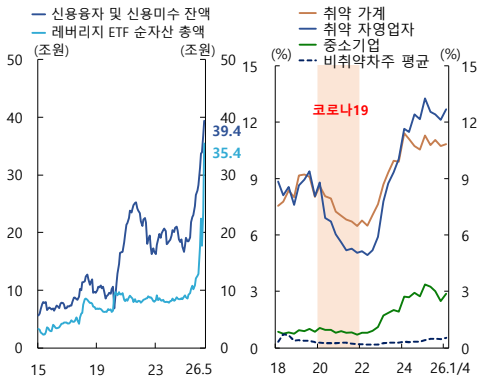
융시스템 인프라로서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차입에 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실물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여건 변화로 이들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과 비은행 부문의 잠재리스크를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점검하였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자영업 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와 맞물려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RP 거래를 통한 시장 간 리스크 전이 또는 일부 신용시장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도 늘어난 상황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주의 부실위험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한 취약부문의 부실이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부문 위주로 부실이 확대 또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적 금융불안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9]

**주식 레버리지 투자 규모 및 취약차주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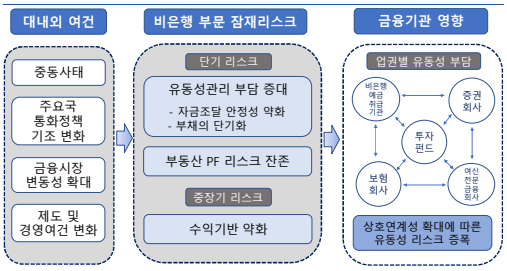

주: 1)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
2) 기업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합산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음으로, 최근 금융경제 및 제도적 여건 변화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부문 내 상호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충격의 전이경로를 분석하였다.[10] 그동안 빠른 성장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이 커진 비은행 부문에 잠재된 리스크를 살펴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안정성이 약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와 증권회사의 부채가 단기화되면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는 구조조정으로 과거보다 완화되었으나, 일부 업권에서 건전성 개선이 미흡하고 추가 부실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제도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카드회사 및 보험회사의 수익기반도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은행 부문의 취약성이 상

[9] 자세한 내용은 <Ⅱ. 주요 현안 분석>「1.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자세한 내용은 <Ⅱ. 주요 현안 분석>「2. 비은행 부문 잠재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호연계 구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업권에서 충격 발생 시 예상되는 유출액보다 확보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증권회사는 타 업권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유동성 충격을 다른 업권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은행 부문 잠재리스크 유형 및 경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 재무건전성과 잠재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11] 자영업자 대출(26년 1/4분기말 1,095.5조원)은 코로나19 기간중 크게 증가한 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하며 금융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익스포저로 평가된다. 한편 자영업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부동산업으로의 자영업자 수 및 대출 집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진입 감소와 고연령 자영업자 부채 확대, 소득 측면의 상환능력 약화 및 취약 자영업자 증가 등 시장, 산업, 연령 및 재무 측면에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후로 이러한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대면서비스업의 부실위험 확대,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상환여력 약화,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이될 가능성, 취약차주 중심의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리스크**

| 자영업 구조 변화 | | 금융안정 리스크 |
|---|---|---|
| 시장 | •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br>• 업종별 경영성과 차별화 | 영세·대면서비스 자영업 부실위험 증대 |
| 산업 | • 자영업자의 높은 부동산업 종사 및 대출 비중<br>• 부동산 집중에 따른 자금배분 효율성 저하 | 부동산업 자영업자 리스크 증대 |
| 연령 | • 청년층 자영업 진입 감소 및 비중 하락<br>• 고연령 자영업자 수 및 금융부채 비중 확대 | 고연령 자영업자 관련 비은행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 |
| 재무 | •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 약화<br>• 코로나19 이후 취약 자영업자 증가 지속 |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우려 |

## 정책 대응방향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12]과 동 충격들이 우리 실물 및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응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점 등에 유의하여,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공조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13],

[11] 자세한 내용은 「Ⅲ.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중동지역 협상 타결 이후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 및 환율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3]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ESG 공시 제도화 동향 및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공지능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잠재 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취약부문의 부실을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RP 차환 리스크 및 외화자금 조달 애로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유동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우량채 발행 시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은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확대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와 선제적인 채무 재조정을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한편 재무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자금조달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 등이 주택시장으로 과다 유입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를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및 운용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인출 확대 가능성에, 여전사와 증권회사는 시장금리 상승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차환여건 악화 가능성에, 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 자금 유출 등에 따른 유동성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용자금 확보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은행권 부동산PF는 비수도권·비주거용을 중심으로 부실정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지역별·용도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PF 평가능력 제고를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부실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변화와 업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대응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관련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권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비은행권의 잠재리스크 관리는 업권별 취약요인 점검과 함께 상호연계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그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대응은 취약부문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금융지원 및 재기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체계를 정교화하고,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경영역량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 부문의 중장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능력 제고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취약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누적 방지에 힘써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사업단계에 따라 금융, 산업, 고용 및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